

국내 보건복지 동향

보건복지부 2016년 11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국민 우려 질환, 암 > 관절염 > 고혈압 > 치매 순(順)

- 심평원, 국민 관심 질병 통계 확대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자신에게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질환(국민 걱정 질환)'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민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이 13.6%로 가장 높았고 관절염(10.2%)과 고혈압(10.0%), 치매(9.9%)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현재 건강 상태 ▲미래 발생 우려 질환 ▲질병 우려 이유 및 대비 상태 등 '국민 걱정 질환' 조사 결과와 2015년 건강보험 진료 현황'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건강 상태

□ 설문조사 참여자의 71.4%가 현재 건강하다고 응답했으며 과거 또는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질문에는 없음(62.8%)이 가장 많았고, 비만(11.6%), 치과 질환(8.9%) 순이었다.

○ 아울러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70.0%이며 그중 가족이 앓은 질환은 암(38.2%), 혈압(23.2%), 당뇨병(19.5%), 뇌졸중(19.5%), 치매(11.8%)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 발생 우려 질환

□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까 봐 우려하는 빈도는 가끔 한다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으며 안 한다(21.9%), 매일 또는 자주 한다(15.0%) 순으로 설문에 답했다.

○ 또한 미래에 발병할 것으로 걱정되는 질환은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 치매(9.9%), 치과 질환(9.7%) 순이며 미래 걱정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44.3%), 불규칙한 생활 습관(34.7%), 가족력(34.7%), 식습관(30.3%), 음주(11.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 걱정 질병의 주요 원인: 각각의 원인 항목에 '예', '아니오'로 응답한 비율.

○ 질병 정보는 주로 TV, 인터넷 등의 매스컴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료인(16.5%), 주변 사람(7.9%), 정부·공공기관(6.7%), 신문·잡지(4.2%) 순으로 조사됐다.

미래 질환 대비 상태

□ 미래에 질환이 발병할 것을 걱정하는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36.7%), 생활 불편(25.6%), 삶의 질 저하(21.7%), 간병 부탁에 대한 부담감(15.3%) 순이었으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외에 민간보험, 개인 저축 등을 추가로 준비한다는 답변이 81.5%나 됐다.

○ 미래 걱정 질환 대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68.2%), 개인 여유 자금 마련(18.2%), 의료시설 지속 확충(4.9%) 순이다.

○ 또한 미래 걱정 질환 발병 예방법은 건강검진(51.2%), 운동(36.9%), 문화생활 등 스트레스 해소(29.1%)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진료 현황 자료 비교

□ 2015년 진료비 청구 자료에 나타난 질환별 환자 수는 치과 질환(51.2%), 고혈압(14.1%), 관절염(11.2%) 순이나 조사 결과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질환은 많은 진료비가 소요되는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참고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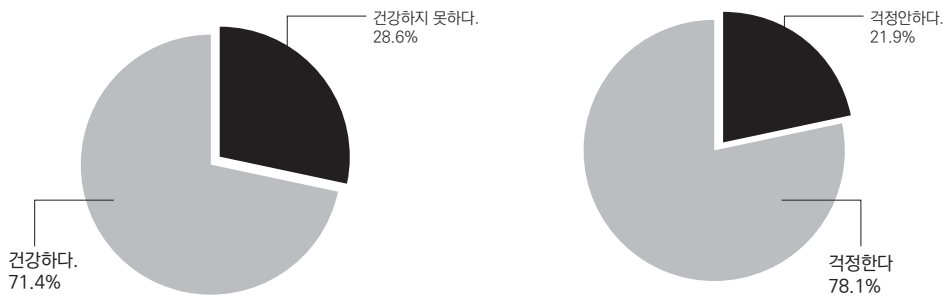
-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미래 걱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생활 습관 등 철저한 자기 관리가 중요하며 국가는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료의 고도화·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1

「국민 걱정 질환」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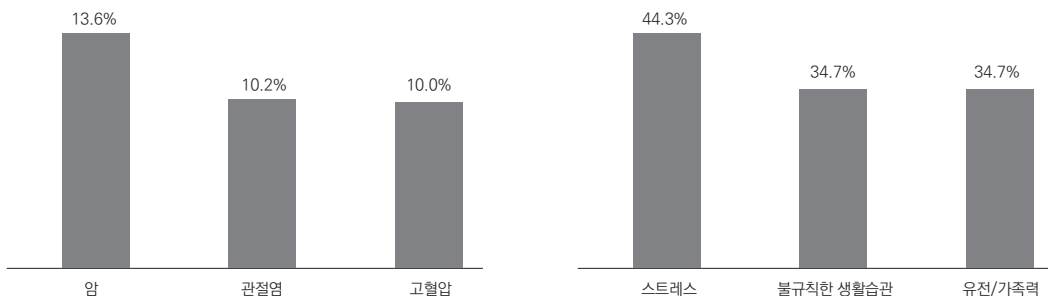
□ 현재의 건강 상태 관련

- 현재 대부분 건강하다고 응답(71.4%)했으나 지금 건강한 국민들도 미래에 질병이 발생할까 봐 걱정(78.1%)하고 있음.



□ 미래 걱정 질환 및 원인

- 미래 발병할 것으로 걱정되는 질환은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이며 질환의 원인은 스트레스(44.3%), 불규칙한 생활 습관(34.7%)임.



□ 미래 대비 상태 및 필요 사항

- 미래 질환 발병 걱정 이유는 의료비 부담(36.7%), 생활 불편(25.6%), 삶의 질 저하(21.7%) 순이며 미래 걱정 질환 대비에 가장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68.2%), 개인 여유 자금 마련(18.2%), 의료시설 지속 확충(4.9%)임.
- 미래 걱정 질환 준비 유형은 81.5%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외에 민간보험, 개인 저축 등을 추가로 준비함.

〈미래에 발병할까 봐 걱정되는 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준비 유형〉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미래 준비 상태(%)
건강보험+민간보험	191	47.0	81.5 (미래를 준비함)
건강보험+민간보험+개인 저축	107	26.4	
건강보험+개인 저축	32	7.9	
기타	1	0.2	
건강보험밖에 없다.	73	18.0	18.5 (미래를 준비 못 함)
의료급여밖에 없다.	2	0.5	
합계	406	100.0	

□ 건강보험 진료 현황 자료와 비교

- 2015년 진료비 청구 자료 환자 수는 치과 질환(51.2%), 고혈압(14.1%), 관절염(11.2%) 순이지만 설문조사 결과 국민 걱정 질환은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 순서임.
- 환자 수 비교 자료

질환명	2015년 진료비 청구 자료			국민 이환 걱정 질환(설문조사)		
	환자 수(명)	비율(%)	순위	환자 수(명)	비율(%)	순위
암	1,316,511	3.3		229	13.6	1
관절염	4,482,926	11.2	3	171	10.2	2
고혈압	5,679,139	14.1	2	168	10.0	3
치매	386,607	1.0		166	9.9	
치과 질환	20,558,410	51.2	1	163	9.7	
심장병	1,311,980	3.3		141	8.4	
뇌졸중	538,443	1.3		140	8.3	

(표 계속)

질환명	2015년 진료비 청구 자료			국민 이환 걱정 질환(설문조사)		
	환자 수(명)	비율(%)	순위	환자 수(명)	비율(%)	순위
비만	16,239	0.0		132	7.9	
당뇨병	2,507,347	6.2		131	7.8	
안과 질환	1,880,759	4.7		129	7.7	
간 질환	1,481,636	3.7		80	4.8	
기타				30	1.8	

※ 국민 이환 걱정 질환 설문조사에서 질환명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 가능.

※ 2015 진료비 청구 자료의 질환명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의료통계정보/질병·행위별 의료통계/국민관심통계(질병/행위 통계)에서 확인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30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의료정보관리부, 2016. 11. 1.

II

한국 사람 10년 전보다 활동 줄고 비만은 늘어 성인 남자 흡연율 39.3%로 2014년 대비 3.8% 포인트 감소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 발표
- 지난 10년간 걷기 실천율은 19.5% 포인트 감소하고 지방 섭취는 5.9g 늘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1월 7일(월) 코엑스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 연도(2015)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제12차(2016)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 지난 10년간 신체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걷기 실천율은 2005년 대비 19.5% 포인트 감소했으며(2005년 60.7% → 2015년 41.2%), 지방 섭취량은 2005년 대비 5.9g 증가한(2005년 45.2g → 2015년 51.1g)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영양조사).

* 1일당 지방 섭취량 5.9g 증가는 1주일마다 삼겹살 1인분(150g)을 더 먹는 것과 같다.

○ 비만 유병률은 10년 전인 2005년 대비 1.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남자 비만 유병률이 크게 증가했다(2005년 34.7% → 2015년 39.7%(국민건강영양조사)).

○ 성인(만 19세 이상) 남자 현재 흡연율은 2015년에 39.3%로, 전년도에 비해 3.8% 포인트 감소해 역대 최소 수준이었다(국민건강영양조사).

○ 흡연하는 남학생은 10명 중 1명(2016년 9.6%)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건강행태, 영양, 만성질환 유병 수준 등을 모니터링하는 국가 조사로 건강정책 평가 자료, 국제기구 제출 통계 생산 등에 활용되고 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60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 통계 조사로 1998년에 도입해 매년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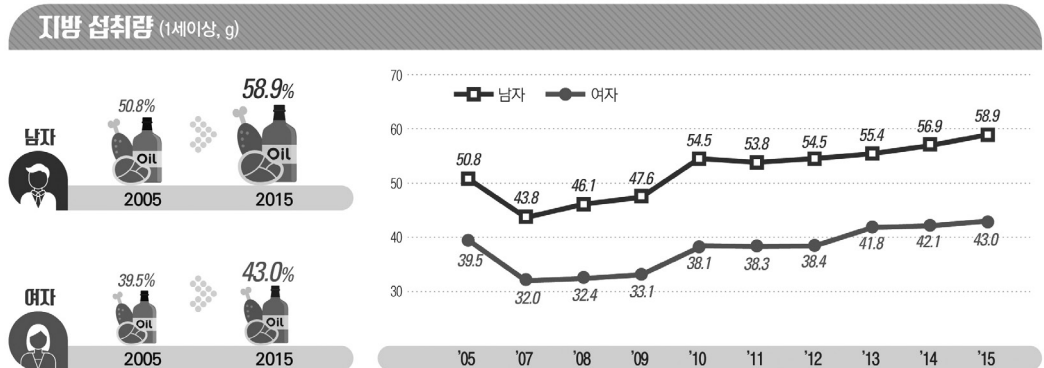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전국 중·고등학생 약 7만 명(800개교)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등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1.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

□ 지난 10년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신체 활동은 감소하고 지방 섭취는 증가하는 등 건강행태가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건강행태 변화는 고콜레스테롤혈증과 남자 비만 유병률 증가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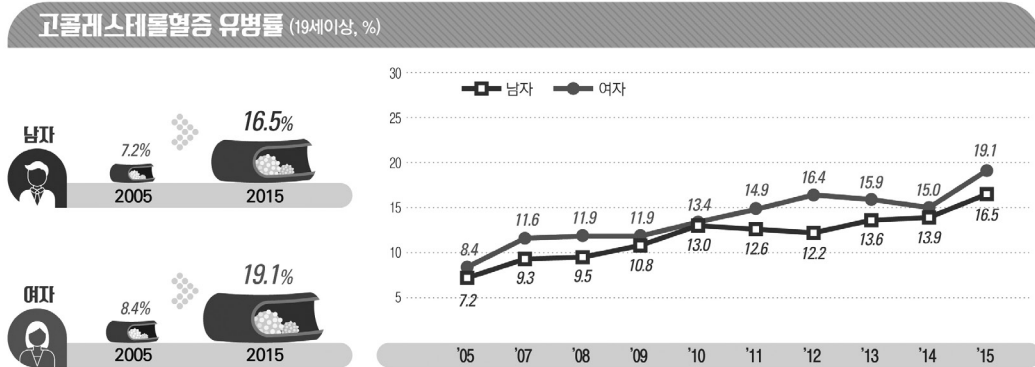
○ (신체 활동) 걷기 실천율은 2015년 남자 41.8%, 여자 40.7%로 조사되어 지난 10년간 약 20% 포인트 감소했으며, 남녀 모두 전 연령군에 걸쳐 신체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양) 영양 섭취와 관련해서는 지방과 음료(커피, 탄산음료 등) 섭취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젊은 연령군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섭취량이 높았다(음료류 섭취량: 남자 2005년 72g → 2015년 221g, 여자 2005년 51g → 2015년 여자 162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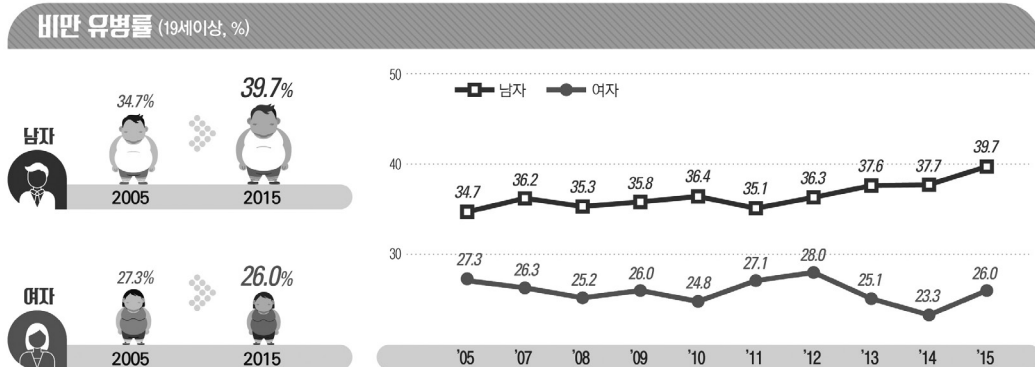
* 지방섭취량(1세 이상): 1일 1인당 지방 섭취량.

-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15년에 남자 16.5%, 여자 19.1% 수준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성별,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군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30세 이상): 8시간 이상 공복자 중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복용한 분을.

- (비만) 남자 비만 유병률은 2015년에 39.7%로, 2005년에 비해 5.0% 포인트 증가했으며 30대 비만 유병률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2005년 38.1% → 2015년 43.6%).
- 여자의 비만 유병률은 비슷한 수준이다(2005년 27.3% → 2015년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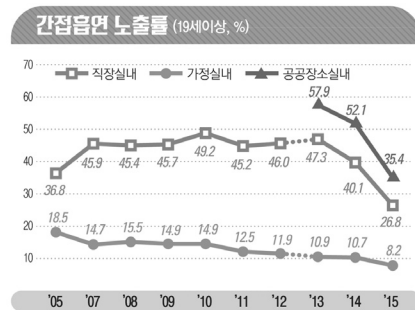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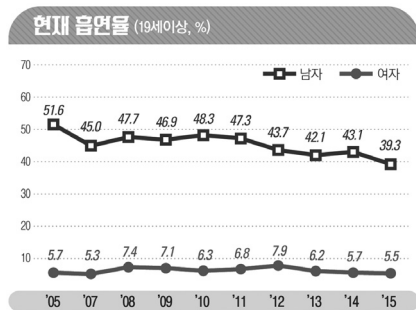
* 비만 유병률(19세이상): 체질량지수 25kg/m² 이상인 분을.

- 지난 10년간 흡연율은 감소했고 월간 폭음률은 소폭 증가했다.

- (흡연) 성인(만 19세 이상) 남자 현재 흡연율은 2015년에 39.3%로 전년도에 비해 3.8%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흡연율은 12.3% 포인트 감소했고 전 연령대에서 모두 감소했다.

- (간접흡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지난 10년간 가정 실내(2005년 18.5% → 2015년 8.2%)와 직장 실내(2005년 36.8% → 2015년 26.8%)에서 각각 10% 포인트 감소했다.
- (음주) 월간 폭음률*은 남자는 2명 중 1명, 여자는 4명 중 1명이었으며 지난 10년간 여자는 6.0% 포인트 증가하였다.

* 월간 폭음률: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 음주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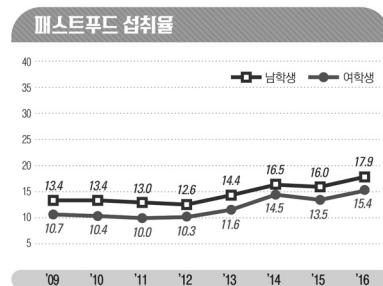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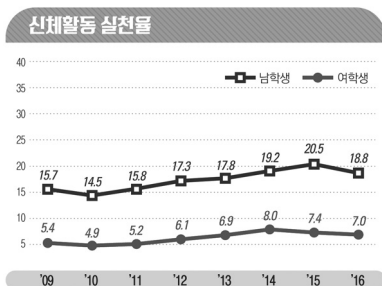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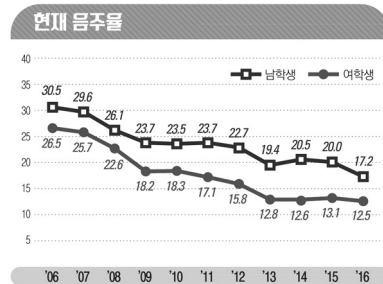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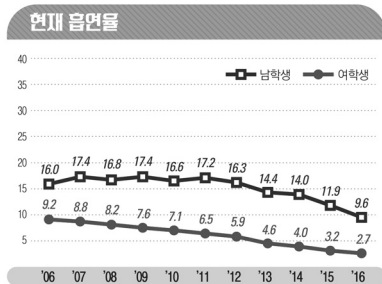


* 현재 흡연율(19세 이상):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비율.

* 간접흡연 노출률(19세 이상): 현재 비흡연자(과거 흡연자 포함) 중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비율(2013년~: 최근 7일 동안 준거 기간 포함).

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주요 결과

- 지난 10년간 청소년(중 1~고 3)의 흡연율,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신체 활동 실천율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 (흡연) 흡연하는 남학생은 10명 중 1명(2016년 9.6%)으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여학생은 2006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2006년 9.2% → 2016년 2.7%).
- (음주) 음주율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남학생 6명 중 1명(2016년 17.2%), 여학생 8명 중 1명(2016년 12.5%)이 한 달 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체 활동) 신체 활동 실천율(하루 60분 주 5일 이상)은 증가하는 경향이냐(2009년 10.9% → 2016년 13.1%)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식생활) 햄버거, 피자, 치킨과 같은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학생은 각각 16.7%, 27.1%로, 지난 10년간 증가했다(패스트푸드 2009년 12.1% → 2016년 16.7%, 탄산음료 2009년 24.0% → 2016년 27.1%).



* 현재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 현재 음주율: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 최근 7일 동안 운동 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루에 총합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

*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은 사람의 분율.

3. 조사 결과의 의의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와 관련해

○ 임상 전문가인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는 “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증가는 신체 활동은 감소하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된 지난 10년간의 건강지표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건강행태가 지속될 경우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함.

또 “식생활 개선과 신체 활동량 증가를 통해 비만과 이상지질혈증을 예방하고, 이런 만성질환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 나트륨 줄이기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 효과가 입증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흡연을 감소는 2015년 담뱃값 인상(2500원 → 4500원)과 금연캠페인 및 금연구역 강화 등 비가격 정책의 효과로 보인다. 아직 정책 효과가 미진한 신체 활동, 영양, 음주 등의 건강 실천 영역은 정책적 관심을 더 기울여 나쁜 건강행태가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5년 전년 대비 3.8% 포인트 감소해 30%대에 진입했으며 나트륨 목표 섭취량 대비 섭취 비율은 2005년 269.6%에서 2015년 200.1%로 감소함.

-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의 꾸준한 예방 교육과 생활지도로 학생들의 흡연, 음주 등 불건강한 건강행태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전체적인 건강행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및 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금년 12월에 발간하며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 <http://yhs.cdc.go.kr>)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3106,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2016. 11. 6.

Ⅲ

대한민국, 금연정책 선도 국가로서 담배규제정책 성과 알린다!

- 대한민국, 7일 인도 뉴델리서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7차 당사국 총회 참석
-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 규제 필요성, 여성 맞춤형 금연 서비스 확대 필요 등 발언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2014~2015년 2년간의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성과를 알리고, 각 당사국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 2012년 11월(5차) 서울 개최 176개국 참석, 2014년 10월(6차) 러시아 모스크바 개최.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담배 소비 및 흡연을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해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함. 2016년 현재 세계 180개국이 비준함.

- 11월 7일(월)부터 11월 12일(토)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당사국 총회는 180개 당사국 정부 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해 FCTC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한다.

예) 담뱃갑 경고그림(제11조)은 협약 비준 이후 3년 내 도입 의무.

- 이번 총회에서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영향을 평가하고 ▶ 담배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담배 규제정책 보호 ▶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과 같은 신종 담배 제품의 예방 및 규제 ▶ 담배규제정책 개발 시 성(性)별 차이 고려 필요성 등 담배규제와 관련된 공통의 관심사 및 최신의 정책 내용들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전자담배에 대해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흡연을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 가향 담배에 대해 FCTC에서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권고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 특히 ‘성(性)별 차이 고려 필요성’에 대한 의제는 우리나라가 대표로 제안해 여성 대상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여성을 위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다.

- 그 밖에 지난 3월 현지 평가를 수행한 FCTC 영향평가* 전문가 그룹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으로,

- 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대중·휴게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등 2014~2015년간 우리나라가 추진한 금연정책 성과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 FCTC 영향평가: FCTC 협약 발효 10년을 맞아 FCTC가 전 세계 담배규제 분야에 끼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WHO에서 대표 국가(대한민국, 영국 등 12개국)를 선정해 실시함(한국은 2016. 3. 29.~31. 3일간 현지 평가 수행).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담배의 폐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으며, 특히 작년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정책에서 큰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번 총회에서 금연 선도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FCTC 이행 성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건강증진과, 13108, 2016. 11. 7.

IV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다!

-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 복지의 중심에 서다!’ 주제로 전국 대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월 10일(목), 11일(금) 양일간 인천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 대회’를 개최한다.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 기관, 법인, 시설,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두는 민관 협력 기구(읍·면·동 포함, 위원 8만 3000명).

○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대회를 통해 “그간 지역 복지 현장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와 복지 자원을 발굴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협의체 위원 등 관계자의 노력을 격려하고, 앞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실상부한 역할 수행을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대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와 함께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협의체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 광역시·도 주관으로 관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한 지역대회의 성과와 협의체 운영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민관 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 확대(보건의료·사회복지 →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을 포괄),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정비(시·도사회보장위원회부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조직·운영 및 기능 확대) 등.

□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전문가,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등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력 기구임.

○ 종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됨.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면서 기능도 확대 개편함.

○ 협의체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고,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특히 금년부터 정부 3.0 협업 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본격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 복지의 중심에 서다!’라는 대회 주제에 따라,

-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함철호 교수(사례관리학회장)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 보건복지부 박금렬 지역복지과장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정책 강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 사각지대 해소와 민관 서비스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단체와 주민을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로 확대함[사회복지관 중심의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재능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동 협력 사업 추진(520명 참여), 나눔 1촌 가게 운영(123곳) 등].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협력 거점 기관으로 대상자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민관 네트워크 198개 기관 공동 사업 추진, 솔루션위원회 운영).
 - (천사계좌 모금 활동) 작은 나눔, 행복한 동네 만들기를 위한 청량면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울주군 전역으로 희망 릴레이 나눔 확산(4400명, 3만 2540계좌, 3065만 7000원/월)
 - 전국 최초 ‘착한 군’ 선정, 공동모금회가 선정하는 착한 가게 단체 가입을 통한 착한거리 선포(언양 명품거리, 두동 봉계불고기특구, 온산 덕신시장).
 - (한가족 희망플러스 사업) 복지 대상자 가구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 전반을 고려해 한 가족나눔 실무 분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함.

희망플러스* 16대 사업

사업명	지원실적	사업명	지원실적	사업명	지원실적
책상지원	459세대 (총 196백만원)	인재육성	22명 (연 70백만원)	소원성취	370명 (총 150백만원)
찬 나눔	330세대 (연 240백만원)	교복지원	632명 (총 210백만원)	가족힐링캠프	120명 (총 100백만원)
주거환경개선	20세대 (총 70백만원)	리틀맘 사업	10세대 (총 40백만원)	창업지원	4세대 (총 40백만원)
문화지원	200세대 (연 72백만원)	따뜻한 겨울나기	1,000세대 (연 100백만원)	생활지원 서비스	500세대 (총 100백만원)

-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지역사회보장 환경 변화에 부응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협의체의 내실 있는 발전이 필요하며,
- 10여 년간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지역복지과, 13118, 2016. 11. 9.

V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실시

-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1만 8370곳에 대해 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교육은 그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처벌 강화, 근로 여건 개선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특별교육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다.
- 이번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 시·군·구) 주관으로 121회에 걸쳐 각 지자체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 ▲아동 권리 및 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어린이집 무단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요령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의 역할(영유아 존중보육 포함) 등을 교육하게 된다.
- 어린이집당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보육교사) 1명*이 집합교육(2시간)을 받고,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으로 돌아가 여타 보육교직원에게 전달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 교육 대상: 1만 8370곳(2016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자가 있는 어린이집 2만 2779곳은 원장 책임하에 안전교육 이수자가 어린이집 전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전달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 “이번 특별교육이 영유아의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참여에 적극 동참하고, 교육 이수자에 의한 전달 교육을 반드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보육기반과, 13119, 2016. 11. 9.

VI

의료관련감염병, 간간하게 챙기는 관리 지침 나왔다

◇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지침 마련

-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항생제 사용 관리 강화
- 환자 발생 조기 인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감시체계 운영
- 손 위생, 보호구 착용, 환자 전용 의료용품 사용, 주변 환경 소독 등 감염 예방 활동
-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주위 환자 적극적 검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관련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VRSA)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VRE)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MRSA)
-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MRPA)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MRAB)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 감염증(CRE)

- 지침에 따라서

◇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수행한다.

-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항생제 사용 관리 강화
- 환자 발생 조기 인지를 위해 검사실에서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내성균 검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 내 감시 체계 운영
- 손 위생, 장갑 등 보호구 착용, 환자 전용 의료용품 사용, 주변 환경 소독 등 감염 예방 활동
- 환자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주위 환자 적극적 검사

-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유행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현장 역학조사와 함께 감염 관리 자문을 하고 있다.

※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안내' 및 '다제내성균 감염 관리 지침' 등을 통합해 이 지침을 마련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환자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일선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감염병감시과·약제내성과, 13123, 2016. 11. 22.

VII

일·가정 양립 정책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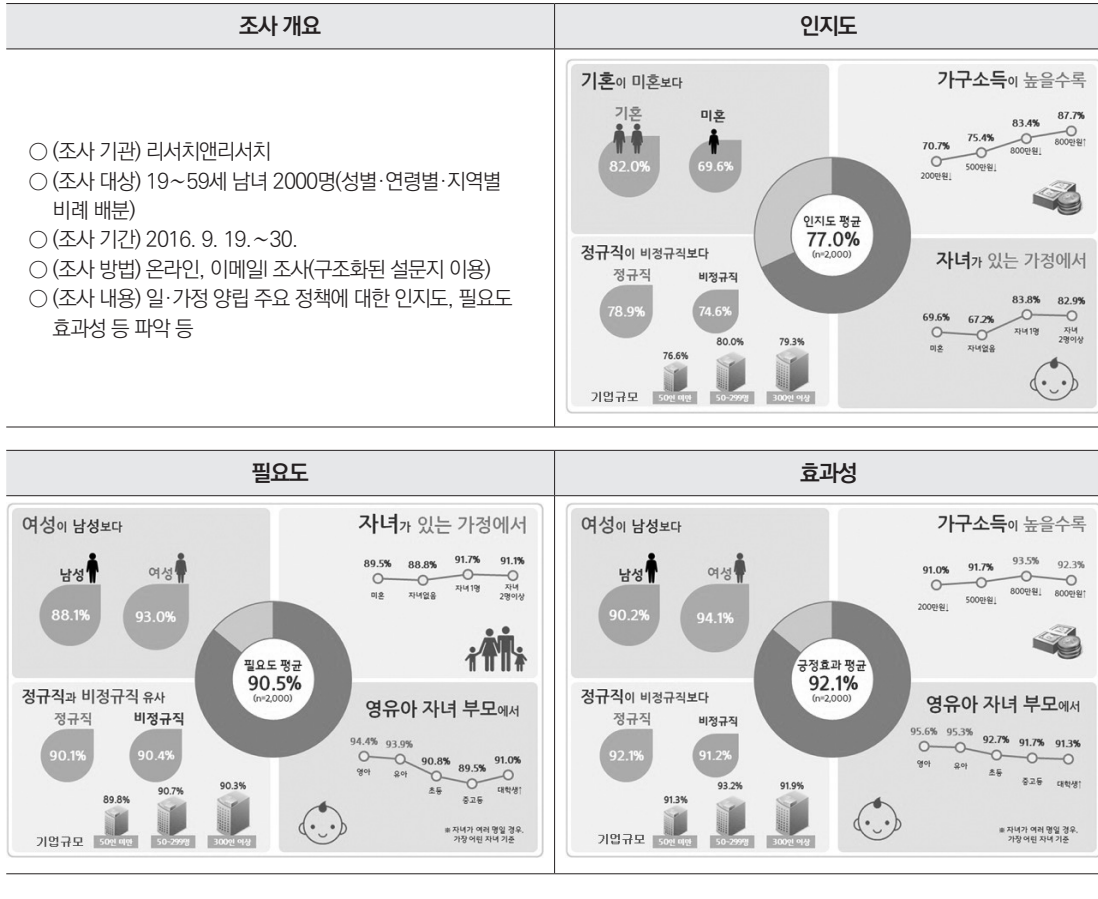
- (인지도 분야)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 높아
 - * 정규직 78.9% > 비정규직 74.6%, 800만 원 이상 가구 87.7% > 200만 원 이하 가구 70.7%
- (필요도 분야) 일·가정 양립 정책 필요도 남녀 모두 높게 인식
 - * 여성 93.0% / 남성 88.1%
- (효과성 분야)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74.2%가 효과성이 있다고 응답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정부 주요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74.2%가 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정책 인지도는 근로 형태, 소득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도, 필요도, 효과성 등 전반적인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메일)를 했으며, 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필요도는 90.5%, 정책 개별의 효과성 평균은 92.1%, 일·가정 양립 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성은 74.2%로 나타났다고 11월 21일(월) 밝혔다.

개별 정책 효과성과 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성의 차이는 개별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일·가정 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도보다 훨씬 더 높음을 의미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



□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별로 보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인지도는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또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았고 정책의 필요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높게 인식했으며 정책의 효과성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및 여성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 제도별로는 가장 먼저 도입된 ‘출산휴가’ 제도가 인지도 및 필요도, 효과성 등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시간제보육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인지도 등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국민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정착”(32.5%), “기업가족친화경영 확산”(31.3%) 순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정책 중요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정착	기업가족친화 경영 확산	아이돌봄, 어린이집 등 돌봄서비스 확산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32.5%	31.3%	18.4%	17.2%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직장 내 분위기’(68.8%)가 압도적이며 ‘경제적인 부담’(26.6%) 또한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일·가정 양립 제도 미활용 사유〉

직장 내 분위기	경제적 부담	지속적인 자기 경력 개발	기 타
68.8%	26.6%	4.2%	0.6%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확산을 위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주 인식 개선	정부 지원 강화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정책 홍보 강화	기 타
41.5%	38.6%	13.9%	5.2%	1.0%

1. 출산·육아휴직제도 및 유연근무 분야

□ 정책 분야별로 보면 국민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도 상당히 높았다.

○ 육아·자기 계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연근무 활성화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정책 체감도〉

정책 인지도				정책 필요도				정책 효과성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남성 육아 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 근무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남성 육아 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 근무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남성 육아 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 근무제
95.4%	91.6%	88.7%	70.2%	95.1%	93.7%	90.2%	88.4%	95.9%	94.1%	91.4%	90.1%

□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인지 경로를 보면 모든 정책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다고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변 사람” 등을 통해 제도를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제도 인지 경로〉

인지 경로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
언론 보도를 통해	66.6%	63.7%	65.9%
주변 사람을 통해	39.0%	41.6%	36.8%
인터넷/SNS를 통해	37.9%	37.2%	32.0%
직장을 통해	28.4%	28.9%	24.1%
정부/지자체 등 홍보 자료를 통해	17.3%	18.4%	15.7%
기타	0.6%	0.8%	0.6%

○ 이는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확산에 언론 등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는바, 정부는 캠페인·리플릿 배포 등 직접적 홍보 외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제도가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단체 등과 함께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및 ‘여성 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를 구성·운영하여,

○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정착되도록 캠페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

○ ‘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2015. 12. 15. 경총 등 경제5단체) 이후 중앙·지역 단위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 회’를 구성·운영, ‘일·가정 양립’의 현장 착근과 전 사회적 확산 지속 추진.

- ▲ (주요 주제) 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②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정착
 ③ 직장어린이집 확대, ④ 남성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⑤ 실천 지원 및 모범 사례 공유·확산 위한 민관 합동 협의 채널 참여

○ 앞으로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10. 18.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현재 국회 계류 중.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내용 】

- (사용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확대
 → 육아휴직 가능 기간(1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단축 근무 기간 2배로 연장 가능.
 ○ (분할 횟수 확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현재 최대 2회 사용 가능하나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의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인상(20만 원→30만 원)하는 한 편,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 영유아 돌봄서비스 분야

□ 영유아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과 같이 부모들이 선호하 는 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정책별 체감도〉

정책 인지도				정책 필요성					정책 효과성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보육	맞춤형 보육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	맞춤형 보육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확충	시간제 보육	맞춤형 보육	초등 돌봄 교실
75.3%	59.4%	89.7%	76.6%	89.1%	93.2%	86.9%	89.7%	90.0%	93.6%	94.3%	89.9%	95.6%	92.8%

- 정부는 그간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근로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2012년 말 2726개에서 2016년 3745개로 2012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국공립 150곳, 직장어린이집 80곳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간제보육'은 주요 이용 연령층인 30대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체감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부는 부모 수요를 반영해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2015년 216개 → 2016년 392개), 시간제보육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맞춤형 보육'은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시행된 제도이다.
 -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89.7%로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맞벌이와 2명 이상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서 높았다.
 - 보건복지부는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종일반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보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등 맞춤형 보육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초등돌봄교실'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걱정 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기능을 강화한 정책이다.
 - 2004년 시범 도입된 후 돌봄교실 및 참여 학생 수 증가 대폭 증가했다.
 - (2013) 교실 7395실, 학생 수 16만 명 → (2016) 교실 1만 1920실, 학생 수 24만 명
 - 이번 조사에서 정책 필요성 90.0%, 정책 효과성 92.8%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정책 수요층인 기혼, 두 자녀 이상 등의 경우 매우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이고 있다.
 -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현장 및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더욱 높여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 인지도, 필요성, 효과성 면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 여성가족부는 현재 만 1세까지만 지원되던 영아종일제를 내년부터는 만 2세아(36개월까지)까지 확대하는 등 맞벌이 부부 양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그간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보육·돌봄 효과성 제고,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여성 고용의 질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 그 결과 육아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성 고용률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규모도 감소하는 추세다.

* 여성 고용률	: (2012) 54.5% → (2015) 55.7%
* 경력단절여성 규모	: (2012) 197만 8000명 → (2015) 195만 2000명
* 육아휴직자 수	: (2012) 6만 4069명 → (2015) 8만 7339명
* 가족친화인증기관 수	: (2012) 253개 → (2015) 1363개
* 남성 육아휴직자 수	: (2012) 2293명 → (2015) 4872명

□ 그러나 여전히 유연한 근로문화나 일·가정 양립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기업 규모나 근로 형태별로 체감도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차별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조사 결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기업 규모가 50명 이하인 소기업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서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정책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제도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 의무, 각종 정부 지원 제도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안내문’을 임신·출산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모성보호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충 등 기본적인 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 국민 체감도 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지역 및 고용 현장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각적으로 점검, 환류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 일·가정 양립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주요 경제단체 등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 제도·인식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임신기부터 출산·양육 및 자녀 교육 시기까지 촘촘하게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13157, 2016. 11. 22.